

한국의 '기지생활권' 형성과 변화 (1968~1977년)

: 동두천 지역 기지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Change of the Living Sphere

Around the Military Camp in Korea (1968~1977):

Focusing on the Military Camp Town of Dongducheon Area

금보운 (KEUM, Bowoon)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현대사 전공

목차

1. 머리말
2. 기지생활권의 형성과 '천두동' 사람들
3. 주한미군 철군과 '기지촌경제'담론의 전개
4. 동두천 '기지경제'의 실제와 낙후성의 기원
5. 맺음말

1. 머리말

2차대전 종전 이후 전세계에 기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1945년 이후 탈식민과 근대국가 수립을 경험한 제3세계 국가들의 성격을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외부적 변인으로만 취급될 수는 없다.¹ 특히 주한미군을 매개로 형성된 거주공간으로서 기지촌은 냉전구조와 권위주의 정권의 상호작용이 반영된 공간으로 주목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기지촌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과 이 지역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수 밖에 없게 했던 국가의 규정력과 그 목적, 그리고 기지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기지촌을 형성한 매개로서 주한 미군과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냉전 하 수립된 분단국가의 권위주의 정권이 유지하는 데에 지역을 동원하는 방식과 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내세운 거시적인 구조 하에서 개인의 생활공간이 어떻게 규정되고, 소외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위한 것이다.

한국의 기지촌에 대한 연구는 크게 기지촌이라는 공간성에 주목한 연구와, 국가안보에 동원된 여성의 신체와 폭력성에 주목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기지촌의 공간성에

¹ 미군기지 네트워크는 미국의 군사전략 및 대외정책에 따라 해외에 미군기지를 주둔시켜 이를 시행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기지의 군사력을 동원하는데 활용된다. 미군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서는 朴博史, 2012, 美軍基地の歴史-世界ネットワークの形成と展開, 吉川弘文館 참조.

주목한 연구에는 기지촌을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으로서 주목한 연구², 기지촌이 갖는 근대공간으로서의 특징과 근대성으로부터 어떻게 소외되었는지를 조명한 연구³, 기지촌의 지리적 특성을 주목한 연구⁴ 등이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은 한국을 둘러싼 거시구조 하에서 기지촌의 형성과, 민속지적 혹은 지리학적으로 갖는 특성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군과 여성과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은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국가에 의해 여성의 신체가 어떻게 동원되는지를 주목한 연구⁵, 기지촌에 거주하는 여성에 집중하여 미군의 폭력성을 구술로서 풀어낸 연구⁶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연구들은 기지촌에서 극단적으로 폭력성이 드러난 지점을 지적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냉전분단국가의 기지촌이 갖는 의미 및 근대국가에 존재하는 외국군대와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과제를 남긴다. 그것은 주한미군에 의한 모든 제한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주민들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존연구는 1980년대의 민주화 동학과 관련지어 보거나,⁷ 남성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기지촌의 존재를 공고화시켰다고 보았다.⁸

본고는 이와는 다르게 경제적 측면을 조명하여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 기지촌 주민들이 미군의 경제적 효과를 믿게끔 하도록 ‘기지경제 담론’을 형성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경제적 동인이 이 시기 미군에 의한 소외를 인식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지촌을 낙후된 지역이지만, 안보를 위해 이를 감당해야 하는 지역으로 박제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전쟁으로 인한 생계수단의 상실과 이로 인해 미군기지에 의존한 실존적인 삶이 지속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도 없다. 본고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가에 외국군이 주둔하게 된 현상과 이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공간이 갖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안보지상주의를 기반으로 한 ‘전장국가’⁹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² 박삼옥 외, 2005, 『사회·경제공간으로서 접경지역-소외성과 낙후성의 형성과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³ 김병섭, 2012, 『한국의 근대공간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지샘.

⁴ 김기주, 1980, 「기지촌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동두천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5.

⁵ Katharine H.S. Moon, 1997, *Sex Among Allies*, Columbia University Press.

⁶ Bruce Cummings etc., 1993, *Let the good times roll : prostitution and the U.S. military in Asia*, New Press.

⁷ Katharine H.S. Moon, 2012, *Protesting America-Democracy and the U.S.-Korea Allia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⁸ 이나영,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

⁹ 전장국가는 자국이 전시하에 있다는 자각 위에서 내정과 외교를 행하는 국가, 또는 비정상적·일탈적 내정과 외교를 자국이 ‘전장’이 돼 있다는 점으로부터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국가를 말한다 (남기정, 2004, 「한미지위협정 체결의 정치과정」, 심지연·김일영 편,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본고에서는 동두천 지역의 기지촌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주둔과 그 주변에 형성된 ‘기지 생활권’을 정의하고, 그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주목한다. 동두천은 경기북부에 위치하여 안보적인 요충지로 인식되었으며, 가장 큰 규모의 기지촌이 형성된 곳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1968년 주한미군 철군과 함께 제기된 기지경제의 전개, 사회적 분위기를 확인하고, 그 실제적 의미를 파악한다. 이때 본고에서 주목한 시기인 1968년~77년은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와는 달리 내부적 위기를 체감한 한국정부의 대응이 1977년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미군철군이 시행된 시기까지 변화하는 양상과 이에 따른 기지촌의 위상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같은 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신문자료와 정부 회의록, 동두천 시사 및 향토지 등이 활용되었다.

2. 기지생활권의 형성과 ‘천두동’ 사람들

1) 기지생활권의 개념과 그 의미

기지촌은 일반적으로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단위를 이르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미군을 접대하는 여성들의 거주지로서 이미지화되어 미군들의 유흥가, 혹은 성매매 공간으로 협소하게 인식된다.¹⁰ 하지만 실제 미군기지 주변의 지역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같이 협소하게 정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기지는 특수목적성 건축물이기 때문에 한번 지어지면 이전 및 폐쇄로 인해 용도전환한다고 해도 그 활용처를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군사·안보적 목적으로 주변지역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¹¹ 이에 따라 기지가 들어선 지역은 세워지고 난 후부터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지의 흔적을 안고 기지에 기대어 생존해야 한다. 더구나 지정학적 의미에서 ‘군사적 요충지’란 점령주체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초기 건설비가 많이 드는 기지의 특성상 기존

전망』 백산서당, 115쪽).

¹⁰ 미군기지와 관련한 여성문제를 주목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이나영은 ‘기지촌’을 산업기반이 전무한 전후 한국사회에서 관광자원으로서 여성의 신체를 주목한 정부가 구획화한 고립화된 지역으로 정의한다 (이나영, 앞의 논문, 5~6쪽). 이는 미군기지 주변의 여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문제들에 주목하기 위한 전제이기는 하지만, 기지 주변을 구성하고 있던 다양한 주체들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기지촌 구성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

¹¹ 군사시설 주변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1950년 제정된 『해군기지법』을 비롯하여 『공군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이 있다. 이렇게 제정된 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김재호·김권일, 2015, 「군사기지·시설 보호와 관련된 법제의 개선방안-군사기지·시설 보호 법제의 체계 정당성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44, 520쪽).

에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연속적으로 기지로 활용된다. 한국의 경우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군사기지로써 위치지어졌던 지역에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

개항과 함께 열강의 주둔과 식민지 하 일제의 군사기지화를 거쳐 해방 후 미군의 점령을 경험한 한국의 주요 군사적 요충지들이 역사적으로 기지에 의해 규정된 지역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들고, 삶을 영위해나감으로써 기지의 성격이 반영된 생활공간이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기지촌’이 안고 있는 제한적인 이미지, 즉 폭력적인 미군과 억압받는 여성들의 공간을 넘어선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며, 이를 ‘기지생활권’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이 기지생활권은 기지촌의 중심적인 상업이었던 유흥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다양한 서비스업 종사자, 그 외 상업군에 종사한 사람,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군속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기지생활권의 중심에 있는 미군기지는 일제의 군사시설이 있던 위치를 이어받기는 했지만,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지를 신설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동이 발생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1950년 6.25전쟁 이후 피난갔던 주민들, 돌아온 주민들, 그리고 이주한 주민들이 혼재되면서 독특한 지역성을 형성하였으며, 지역 구성원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군, 즉 외국인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이국적인 분위기와 함께 행정운영 및 세제 등에서 면제권을 갖는 등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특징을 갖는다.

2) ‘기지생활권’으로서의 동두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동두천의 경우도 이와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동두천에 본격적으로 미군이 주둔한 것은 1951년 7월부터이다. 미 24사단 미군휴양소가 먼저 있었고 (2~3월), 이후에 미 3사단 6연대(52~53년)와 제25사단 24연대 등이 주둔하였다. 미7사단(52~70년) 등이 주둔하였으나 여타의 부대는 휴전성립 후 철수하였고, 보병 제2사단(1970~현재까지)이 이곳에 주둔하게 되었다.¹³ 이렇게 주둔하게 된 미군기지는 캠프 케이시(Camp Casey)와 캠프 호비(Camp Hovey)를 중심으로 총 5개의 미군기지와 1개의 미군훈련장(Gimbols)이 있었다. 2004년 기준으로 5개의 미군기지와 1개의 훈련장이 공여한 면적은 총 40.63km²에 달했다. 이는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약 42.5%에 해당하는 면적이었다.¹⁴

전쟁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주한 상황에서 남아있던 주민들은 미군의 주둔과 기지 신설을 이유로 1951년 민사처에 의해 소개되기 시작했다. 원래 살던 위치에 복귀하는

¹² 대표적인 예로 부평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군은 부평에 있던 일본군 육군 조병창 시설을 접수해 주둔했고, 이곳을 주로 병참기지로 활용하였다 (부평역사박물관, 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57쪽).

¹³ 동두천 시사편찬위원회, 1998, 『동두천시사 上』, 280쪽.

¹⁴ 김병섭, 앞의 책, 26쪽.

것이 불가능해진 주민들은 각목과 상자를 이용하여 판잣집을 세우기 시작했다. 미군부대에서 유출되는 폐품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순식간에 판자촌을 형성하였으며, 면사무소와 지서, 5일장까지 옮겨오게 되었다.¹⁵ 기존 주민에 실향민을 비롯하여 월남민 등 전쟁으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판자촌은 점차 그 수를 더해갔다. 전후 폐허가 된 상황에서 생계수단을 찾아 기지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기지생활권'을 형성한 것이다.

한편, 미군의 주둔으로 동두천 주민들이 잃은 것은 원래의 거주지 뿐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이동과 물류의 유통에 중요한 수단이자, 근대화의 주요한 형성 통로였던 철도의 활용도 제한되었다. 동두천을 지나는 철도는 경원선으로 일본이 러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건설한 군용철도였다. 캠프 케이시에는 경원선이 지나가는 동두천역과 부대를 연결하는 연결철로가 있다. 이 연결철로를 이용하여 미군은 용산역에서 경원선을 통해 실려온 미군물자를 캠프 케이시까지 옮길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철도역이 비단 주한미군에게만 중요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철도역은 보통 지역 주민의 중요한 삶의 터전으로 지역 중심가를 형성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도시는 지역의 중심인 철도역 일대를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¹⁶

이렇게 미군이 주둔하면서 기존의 거주권과 물류 및 인적 수송에 제한을 받게 된 동두천 주민들은 환경적으로 기지와 연관된 생활방식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다. 기존의 생활수단을 포기하고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업종으로 바꾼 사람들, 미군기지에서 일하기 위해 이주한 사람들, 공업시설의 노동자들, 그리고 미군대상 상업 종사자들은 동두천의 생활권을 구성한 주요 구성원들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구성분포를 살펴보자.

<표1> 1968년 기준 동두천 내 취업대상자 직업별 인구¹⁷

직종	규모(명)	비중(%)
서비스업	12,195	46.9
상업	7,156	27.5
농업	2,844	10.9
군속*	1,525	5.9
기타	724	2.8
실업자	1,566	6.0
합계	26,010	100

* 1966년도 전국외국기관노조 동두천지부의 숫자기준. 노조가입자 기준이므로 미가입자를 포함하면

¹⁵ 동두천향토지 편찬위원회, 1988, 『동두천시 향토지』, 693~694쪽.

¹⁶ 이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 주한미군은 주요 철도 연결망 근처에 주둔하였다. 실제로 한반도 중부 지방에 위치한 주요 미군기지의 위치를 살펴보면 주요 철도역 부근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병섭, 앞의 책, 28~29쪽).

¹⁷ 동두천향토지 편찬위원회, 위의 책, 124쪽에서 재편집.

실제로 더 많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통계는 임송자, 2009, 「1960년대 전국외국기관노조와 한미행정협정 체결 촉구 운동」, 『사림』 32, 179쪽 참조).

위와 같은 주민들의 직종 분포는 동두천 지역경제 및 생활권을 유지하는 매개의 불안정성과 가변적 성격을 드러낸다. 이는 동두천과 미군의 관계,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기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동두천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면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고향을 ‘천두동’이라고 말하라고 하였다.¹⁸ 동두천이 고향이자 1983년 ‘동두천 시대학생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이강석씨는 자신의 제자가 고향이 동두천이기 때문에 파혼을 겪어야 했던 일과 대학생 때 고향이 동두천이라고 하자 이상한 눈빛으로 보았던 기억을 떠올린다. 이강석씨는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곳, 휴전선과 맞닿은 지역에 대한 편견에 의한 것이었다고 회고한다.¹⁹ 이처럼 동두천 주민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까지 자신들의 지역을 ‘천두동’이라고 소개할 만큼 기지생활권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이들은 기지촌을 떠날 수 없었고,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지 못했다. 아래에서는 이를 주한미군의 철군과 함께 등장한 위기론, 즉 ‘기지촌 경제’ 담론을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3. 주한미군 철군과 ‘기지촌경제’담론의 전개

1) 주한미군 철군과 정부의 안보위기 강조

미군의 주둔과 점령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진영정치를 공고히 하는 데에 핵심적인 정책이었다.²⁰ 해외에 주둔한 미군은 현지에서 직접 민간인들과 접촉하며 지역사업에 대한 협조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미국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군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1945년 이후 중국의 국공내전, 한반도의 6.25전쟁, 베트남 전쟁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의 분쟁까지 냉전은 제3세계의 국지적 전장화를 기반으로 전개된 지속적인 진영분쟁의 연속이었다. 미국은 미군기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러한 분쟁에 신속히 개입하고, 결정권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분단과 함께 미군의 점령을 받았던 한국의 경우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했지만, 뒤이어 발발한 1950년 6.25전쟁을 계기로 미군이 다시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반공과 대립의 정치로 국가정체성을 수립해 왔던 냉전분단국가의 성격을 지닌 남한에 있어

¹⁸ 김병섭, 앞의 책.

¹⁹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동두천시 30년사』 8, 120쪽.

²⁰ Carl J. Friedrich and associate, *American Experiences in Military Government in World War II*, 1948, p.v.

주한미군은 항시적인 위기와 그에 따른 철저한 반공의식강화, 그리고 독재정권의 유지로 이어지는 데에 대한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점은 남한을 전시하에 있다는 점을 들어 모든 정책들을 합리화하는 국가인 '전장국가'로서 정의하도록 한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철군을 언급할 때 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막으려고 했다. 특히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비롯하여 김신조 간첩단의 청와대 침입 등이 발생되었을 때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즉 안보위기를 강조할 수 있었다. 반공주의는 해방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빨갱이 담론'과 전쟁으로 인한 실질적인 공포로 인해 강화되어 왔고, 이는 지역 하부조직까지 침투하여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기반을 다졌다.²¹ 1972년 유신의 선포는 강고한 반복주의와 적대감을 내세우며 사회를 통제하고자 한 독재정권의 한수이자 정권안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²²

하지만 이러한 안보위기의 강조가 정권이 의도했던 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유입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적으로 1960년대 말부터 전개되었던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와 이러한 대외적 압력으로 인한 1972년 남북협정의 체결은 정부의 안보위기 강조를 무색하게 했다. 또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대중 후보의 공약 중 하나는 미국·일본·중국·소련과의 평화적 합의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고, 이 같은 분위기 하에서 향토예비군을 폐지하는 것이었다.²³ 38선 접경지역으로 6.25전쟁 시기에 전선으로서 전투의 부침을 겪었던 동두천에서도 안보위기를 부정하는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안보위기가 크게 강조되었던 1969년 시기, 개헌을 위한 찬반투표 시 동두천의 찬성 숫자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²⁴ 1969년의 개헌은 안보위기를 강조하며 박정희 정권이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접경지역이자 미군기지를 수용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동두천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동두천은 전통적으로 야당선호의 경향을 보이며, 여촌야도(與村

²¹ 박정희 정부시기 지역 하부단위를 동원한 안보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허은, 2015, 「박정희 정부시기 농촌사회 재편과 지역 총력안보체제 구축-구성면 면정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사총』 84 참조.

²² 김정배, 2013, 「미국, 유신, 그리고 냉전체제」, 『미국사연구』 38, 164쪽.

²³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은 선거결과를 분석하며 “1975년에는 대통령을 바꾸겠다는 한국 대중의 의지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석률, 2012,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270쪽). 이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임과 동시에 김대중 후보의 평화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라고 이해할 수 있다.

²⁴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동두천시가 포함된 양주군에서 박정희에 대한 투표수는 53,330표, 김대중에 대한 투표수는 51,571표로 비등한 숫자를 기록하였다. 덧붙여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윤보선 후보에 대한 지지도(47,318표)가 박정희 후보에 대한 지지도(47,049표)가 높았다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6~98쪽).

野都)현상이라 평가하기도 한다.²⁵ 하지만, 동두천이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 감당해 온 안보적인 부담과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를 단순히 여촌야도 현상의 일환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²⁶ 이는 안보위협을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지역에서 증명한 안보위기의 허구이며, 정권이 만들고자 했던 위기와 이를 위한 사회통제 시도의 균열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지촌 경제’ 담론과 떠나면 안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미국의 냉전 대외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지의 해외 주둔과 분단국가로서 한국정부가 부여한 주한미군의 의미, 이를 통한 독재정권의 강조와 안보위기의 강조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안보위기의 강조가 실질적으로 안보위협을 체감할 수 있는 접경지역, 동두천에서 수용되지 않음을 드러냄으로써 정부의 안보위기를 통한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설득되지 않았음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동두천의 주민들은 왜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 절에서는 ‘기지촌 경제담론’, 즉 주한미군이 철군하면 지역경제, 나아가서 한국경제에 위기가 온다는 담론의 전개를 분석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기지촌 경제담론’은 주한미군 철군이 다시 제기되었던 197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은 국회답변에서 “미군주둔으로 얻는 달라는 1억 6천만 달러인데, 2만 병력이 감군될 경우 8천만 달러의 외환수입이 줄 것 같다”고 증언했다. 주한미군 감군에 따라 기존 경제규모가 반감된다는 것이었다.²⁷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기지촌 경제의 쇠퇴에 대한 우려는 각 언론의 보도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자.

우선 물품 용역 부분은 미군기지 감축과 함께 발주가 줄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되었다. 용역군납은 군수, 하역, 세탁, 경비, 이발, 미용에 이르기까지 17개 업종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도 외화획득비중이 높은 운수, 하역 부문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견되었다.²⁸ 군납은 부문적인 피해보다 군납으로 인한 수출 효과의 상실이라는 피해가 더 컸다. 군납은 100%의 가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억달러의 수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은 미국정부가 규정한 ‘미국우선구매(Buy American, BA)’ 정책으로 OPS(Oversees Price System)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

²⁵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9쪽.

²⁶ 일반적으로 반복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이북지역 출신인구가 1968년 기준 전체 인구의 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성향은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인구지표는 동두천향토지 편찬위원회, 앞의 책, 124쪽 참조.

²⁷ “미군감축과 기지촌 경제(1) 용역”, 『동아일보』, 1970.7.17.

²⁸ “미군과 한국경제 감군 후 찾아 올 부작용은”, 『매일경제』, 1970.7.11.

래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은 간과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미군 PX를 상대로 보따리 물품장수를 하는 여성들은 기만원의 장사 밀천을 들며 하루살이로 살아오다가 앞으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주한 미군을 통해 시중에 흘러나오는 무면허 외래품은 수억원어치나 된다고 계산되었다. 언론은 주한미군이 철수된다면 미군기지에 의해 형성된 이 같은 경제규모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인 종업원도 감원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PX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무면허 외래품의 물동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됐다.²⁹ 하지만 이 같은 평가는 역시 미군 당국이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병사들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미국정부 당국의 대외정책에 따라 소비를 제한하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즉 주한미군 철수 이전에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의 감소에 대해 간과했던 것이다. 이 같은 주한미군의 병사 외출제한 및 소비통제는 한국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4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미군관련 노동자들의 실업문제도 제기되었다. 경비원으로부터 중장비수리공 등 100여 직종으로 분류된 4만 6,000여명의 직접고용종업원들이 연간 7,000만 달러를 벌고 있었다. 이들이 대량, 그리고 일시에 실직될 경우 그것은 곧 커다란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었다.³⁰ 특히 1970년 12월, 감원통고를 받은 한국인 경비원 21명이 분신 자살을 하겠다며 시위를 벌이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기도 하였다.³¹ 이처럼 언론들은 1970년 상반기, 긴 분량의 기사 시리즈를 게재하여 주한미군 철수 이후 경제적 타격상을 대중들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정부 역시 기지촌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며 이 같은 담론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1970년 7월 13일 개최된 제74회 4차 국회 본회의에서 정일권 국무총리는 미군철수에 의한 경제적 타격을 군납, 미군부대 종업원 등의 측면에서 세밀하게 제시하며 앞으로의 한미 간 협의방향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³² 이 같은 정부의 인식을 반영하여 경제기획원에서는 1971년 2월, 경기지역 기지촌 영세민을 위한 구호양곡대 4,571만 2,5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제안하였다.³³ 또한 경제기획원은 1971년 11월 다시한번 경기지역 기지촌 영세민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결의하였다.³⁴ 이와 함께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은 미군철수에 따른 기지촌

²⁹ “미군과 한국경제 감군 후 찾아 올 부작용은”, 『매일경제』, 1970.7.11.

³⁰ “미군감축과 기지촌 경제(2) 물품”, 『동아일보』, 1970.7.21.

³¹ “메아리 없는 “감원철회” 미군기지 폐쇄와 종업원들”, 『동아일보』, 1970.12.4.

³² “제74회 4차 국회회의록”,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

³³ 1971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기지촌 영세민 구호양곡대), 1971.2.23, 국무위원 김학렬(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국무회의의장에게 보낸 안건 결의안.

³⁴ “197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기지촌 및 수해지구 영세민 구호양곡대)”, 1971.11.23, 경제기획원 장관이 국무회의의장에게 보내는 안건 결의안.

의 구호 및 지원을 주장했다.³⁵ 농협중앙회는 영농자금 중 소득증대부문에서 전국 기지촌에 1억원을 지원했으며,³⁶ 이를 정부가 분담하여 지원하기도 했다.³⁷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인사가 함께 지방순회를 돌 때에도 기지촌 문제 해결이 강조되었으며, 각 시도별 특수시책으로 기지촌에 대한 경제대책이 제기되기도 했다.³⁸

하지만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에 비해 정부의 대책은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1년 8월 경제기획원이 일자리를 잃은 기지촌 주민들에 대한 직업훈련경비 지출안건을 부의하고, 의결되었지만, 1,000만원 정도에 불과했고,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파견 부족경비와 겸용되는 것이라 적극적인 대책이라 보기는 힘들다.³⁹ 그나마도 1972년 이후에는 기지촌에 대한 지원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기지촌 경제’ 담론은 기지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기지촌의 주민들은 미군을 떠나면 안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 외의 대안에 대해 고려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국정부가 ‘기지촌 경제’ 담론으로 규정한 기지촌을 떠나면 안되는 사람들은 미군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였다.

4. 동두천 ‘기지촌 경제’의 실제와 낙후성의 기원

1) 철군 외 ‘기지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동두천의 산업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철군과 함께 정부의 정책과 언론에 의해 전개되었던 ‘기지촌 경제’ 담론의 실체는 어떠했을까. 이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동두천에 미군이 주둔할 때 주민들이 접했던 경제적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동두천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1951년, 주민들의 소개가 시작되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라 주민들이 원래의 보금자리를 잃었음에도 판자촌으로 다시 거주지역을 형성하였지만, 이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52년 11월말경 주민소개가 끝나고 1956년 토지징발증이 발급되었으며 토지징발보상금은 국방부 관재과에서 담당하였다. 가옥보상은 전무하였고, 토지에 한하여 국가발행채권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채권의 특성으로 중간에 소

³⁵ “민족주체세력을 결성 박후보 수원유세 야선 생트집으로 대중선동”, 『경향신문』, 1971.4.20.

³⁶ “5월 중 179억 방출”, 『매일경제』, 1971.5.3.

³⁷ “정부서 1억원 보상 기지촌 농자금 이차”, 『경향신문』, 1972.4.20.

³⁸ “올 첫 지방장관회의 개최”, 『동아일보』, 1972.3.7.

³⁹ “71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국제기능 올림픽대회 파견 부족경비 및 기지촌 직업훈련경비)”, 1971.8.26, 경제기획원 장관이 국무회의의장에게 보내는 안건 결의안 ; “제70회 차관회의록”, 1971.9.2.

실되는 것들이 대부분일 수 밖에 없었다. 1966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의 2조 1항, 주한미군이 공여받는 대한민국의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물의 설비, 비품, 정착물을 포함한다는 조항에 의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이에 토지소유자·가옥주 또는 동두천이 고향인 주민들만 어려운 생활고를 강요당했다고 회고되었다.⁴⁰ 아직까지 토지보상금이나 가옥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주민들도 많다. 참고로 현재 주한미군이 수용한 건물총수는 1만512개이며, 그들이 기지로 사용하는 땅의 면적은 9천만평으로 서울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땅들은 거의 전부가 무상으로 미군에게 주어졌다.⁴¹ 또한 <한미행정협정> 제6조 1항은 미군에게 한국의 용역시설 사용순위에서도 우선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사용료나 요금도 낮은 가격으로 내고 있다.⁴²

무엇보다 군사시설 주변의 개발제한 규정 때문에 지역의 개발방안에도 한계를 받을 수 밖에 없다.⁴³ 직접적으로 동두천의 걸산리(현재의 걸산동)를 예로 들 수 있다. 걸산리는 미군기지에 가로막혀 물류의 이동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동통로마저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나 차량이 통행하려면 부대 출입증을 내야하며, 출입증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다. 출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군부대 민사과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절차상 시일이 걸리고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이에 걸산리는 ‘머나먼 외로운 섬’이라 칭해지기도 했다.⁴⁴ 걸산리는 잠업수입 연 200만원을 벌어들이고, 48마리의 소를 키우며, 쌀, 보리, 콩 등 곡물을 재배하는 230여명으로 구성된 마을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미군기지의 후문이 차단될 경우 생활필수품은 물론 주요 종사업종과 관련된 농산물, 농기구 및 비료를 운반할 수 없었으며,

⁴⁰ 동두천 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80쪽.

⁴¹ 이러한 토지를 ‘미군공여지’라고 칭한다. 미군공여지란 한국정부가 기지·시설·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부지를 주한미군에게 공여해 주한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이에 근거한 <한미 행정협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군공여지는 용도별로 전용공여지, 지역권공여지, 그리고 임시공여지로 구분된다. 전용공여지는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미군기지·훈련장·기타시설이 들어서 있다. 지역권공여지는 사격훈련장 안전지대나 미군송유관·수도관·전선 등을 보호하기 위해 확보한 부지로 원래의 토지 사용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부지를 말한다. 임시공여지는 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게 사용권이 주어지는 부지를 의미한다. 2000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미군공여지는 총 7,447만여평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이중 전용공여지는 약 3,603만평, 지역권공여지는 1,017만평, 임시공여지는 2,827만평이다. (김동성 외, 2001,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50쪽)

⁴² 김병섭, 앞의 책, 281쪽.

⁴³ 군사시설의 사유지 제한 및 개발 제약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김재호, 김권일, 앞의 논문 참조.

⁴⁴ 경기도 동두천시, 2002, 『동두천 지방행정사: 이담의 발자취』, 동두천문화원, 707쪽.

중고등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통행이 어려웠다. 이에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지장을 끼칠 수 밖에 없었다.⁴⁵

이처럼 동두천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주민들은 기존의 삶의 방식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지에 의한 상업적 이득을 강조하며 미군철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 주민들에게 어떻게 와닿았을까. 물론 동두천의 주민구성에서 외지인이 많았고, 이들은 주한미군이라는 새로운 소비주체를 따라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상업경제의 규모와 의존성을 무시할 수 없다. 동두천의 상업종사자들은 미군 및 군속자들의 소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 및 군속자들의 감소는 소비주체의 감소로 이어졌음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지촌 경제의 추동력은 소비의 규모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고회율과 공정환율에 비해 높은 시장환율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소비가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은 경제적 부로 이어질 수 있었고,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시장거래로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 즉 명목적인 소비증가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정한 환율구조였다. 뿐만 아니라 철군 외에도 주한미군 당국의 병사들의 외출 및 기지촌에서의 소비 제한 정책 역시 기지경제의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⁴⁶ 이는 달러 및 PX물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외정책의 수행에 있어 미국 경제부담에 대한 내부적 비판에 의해 설정된 정책이었다.

이와 함께 군납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자면, 단순히 주한미군이 감소되어 군납이 줄었다는 비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정부의 정책, 즉 미국산우선구매(BA)정책을 간과한 것이다. 미국정부는 1963년 BA정책을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군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⁴⁷ 앞서 1962년에는 달걀 소비가 줄 것에 대한 우려에 업자들이 나서기도 했다.⁴⁸

또한 기지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과연 기지에서만 발생할 수 있었는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해방 이후 1970년대에 동두천에 들어선 산업생산시설을 살펴보자. 1981년 동두천시가 양주군에서 분리될 당시 동두천읍의 제조업 등록 공장수는 61개였다. 1970년대 초까지 경기북부지역의 중소기업 업체수가 327개였으며, 양주군에 총 120개의 기업이 입주해있었음을 보았을 때 양주군의 약 50%, 경기북부의 약 19%의 공장이 동두천에 밀집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⁴⁹ 물론 경기북부 전체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동두천 전체의 규모를 보았을 때 그 생산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⁴⁵ 경기도 동두천시, 앞의 책, 710쪽.

⁴⁶ 주한미군은 외출시 미군이 보유하는 달러 금액을 제한하거나, 본국 송금을 권유하는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동아일보 특별취재반, 1990, 『철저해부 주한미군』, 동아일보사, 176쪽).

⁴⁷ “까다로워진 미 외원”, 『경향신문』, 1963.4.6.

⁴⁸ “미 BA정책에 호소하는 한국달걀, 새해부터 군납막혀”, 『경향신문』, 1962.12.26.

⁴⁹ 동두천 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64쪽.

<표2> 기지 규모와 공장 분포 (1988년 기준)⁵⁰

지역이름	기지면적 (km ²)	공장개수	생산산업분야
보산동	14.36	1	양화
광암동	14.05	1	두부
탑동동	11.95	0	-
동두천동	0.21	24	피혁, 기타제조
상패동	0.06	30	피혁, 기타제조
기타	0	57	피혁, 기타제조

위의 표를 살펴보면 동두천에서 가장 넓은 미군기지 공여지를 보유하고 있는 보산동과 광암동에는 1개의 공장, 그것도 구두와 두부 같은 소비재 공장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넓은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탑동동에는 공장이 단 하나도 들어서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지의 존재가 산업시설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기지가 존재했던 동두천동과 상패동에 설립된 공장의 수(54개)가 기지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에 설립된 공장의 총 수(57개)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규모가 미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주목할 점은 산업분야이다. 이는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장이 주요 생산물로 종사하고 있는 피혁산업은 동두천시 경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전국의 피혁산업 분포 중에서도 14.5%를 차지하며, 경기도 내에서는 21.7%를 차지하고 있다. 수익면에서도 수출로 인해 성과를 드러냈다. 특히 1970년 피혁산업이 수출 특화산업으로 지정되면서 피혁제품의 수출 증대를 지향한 정부의 지원을 뒷받침 삼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실제로 피혁산업의 수출은 1975년 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988년 55억 달러로 무려 39배가 증가하기도 했다.⁵¹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미군의 철군 외에도 한국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미군 및 미국 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동두천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으며, 동두천에 애초부터 미군기지가 아니면 살 수 없을 만큼 산업적 대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개발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전국적인 개발을 진행했던 시기, 동두천은 이러한 정책에서 배제되었고, 기지에 의존해야만 하는 지역으로 규정되었다.

2) 안보지상주의, 그리고 기지와 함께 남아야 하는 사람들

⁵⁰ 기지의 규모는 김병섭, 앞의 책, 28쪽 참조. 공장의 개수 및 산업분야는 동두천향토지 편찬위원회, 앞의 책, 668~672쪽을 재정리.

⁵¹ 동두천 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68~671쪽.

주한미군의 철군이 시작되면서 사회적으로 전개된 ‘기지촌 경제’ 담론은 궁극적으로 기지촌을 미군기지에 의존하지 않으면 달리 생계수단을 가질 수 없는 공간, 안보위기의 희생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지촌 경제’ 담론에는 예비적 사회위기를 기지촌 내부에 가두어 통제하고자 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예컨대 미군관련 노동자들의 실업문제를 제기한 언론 보도를 보면,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미군 노동자들의 실업은 7만 여명에 대한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평가되었다.⁵² 이 같이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들은 실업인구로서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감당해야 하는 정부가 그 부담을 미군기지에 전가한 것이다.

‘기지촌 경제’ 담론을 통한 정부의 기지촌 관리 방식은 1972년 10월 유신 선포 이후 강력한 사회통제 정책과 함께 본격적으로 기지촌을 낙후된 지역으로 상정하여 통제 하에 두려는 방식으로 변모한다. 1970년대 초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그 해결이 비교적 떠들썩하게 제기되었다면 실제로 대규모의 철군이 시행되었던 1977년에 이르면 이에 대해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1972년 이후 기지촌은 마약 및 밀수 등 범죄의 소굴로 지적되었다.⁵³ 또한 1970년대 중반 새마을 운동이 전개와 함께 서해5도와 같은 그룹으로서 개선되어야 할 낙후된 지역으로 표상되었다.⁵⁴ 기지촌에 대한 지원은 외화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외화와 관련된 수입일 경우 영업세를 면세하는 수준에 그쳤다.⁵⁵

이 같은 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기지촌 정화사업’이었다. ‘기지촌 정화사업’이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기꺼이 협력한 업주들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⁵⁶ 1971년 12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기지촌정화위원회의 제정과 미군 기지촌들에 대한 ‘정화정책’의 공식화를 명령했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안보적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며, 기지촌의 주민들을 정화사업에 동원하였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는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북한에 의한 위협도 감지되지 않던 시기로, 한국정부의 안보지상주의는 위기를 조성하며 존재했던 ‘전장국가’, 권위주의 정권의 안보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개되었던 기지촌 정화운동은 기지촌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미군이 떠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기지촌의 낙후성을 보다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

⁵² “미 감축의 안팎을 진단하는 특집시리즈(5) 불황이 깔리는 기지촌”, 『경향신문』, 1970.7.29.

⁵³ “마약사범의 소탕”, 『매일경제』, 1972.11.2 ; “황철수설”, 『동아일보』, 1972.11.4

⁵⁴ “국민의 대공이념무장을”, 『동아일보』, 1976.1.27 ; “박대통령 순시 내무부서 집고 농촌취락구조를 개선” 『동아일보』, 1977.1.31

⁵⁵ “농가부업면세 108만원까지”, 『경향신문』, 1976.12.22

⁵⁶ Katharine H.S. Moon, 1997, *Ibid.*

다.

기지촌 정화운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기지촌에서 경찰직원, 검문소, 차량, 불시검문의 수가 급증했다. 이와 함께 미 군대 정찰팀도 미군과 한국인 주민의 행동을 감시 하기 위해 수적으로나 종류에 있어 이전보다 늘어났다. 이는 1970~71년 기지촌에 대한 지원금 할당 등의 방향으로 기지촌 영세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과는 달리 통제의 강화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1972년 10월 유신 이후 기지촌 정화대책에 대한 계엄사령부의 “기지촌 주변 마약 사범 및 성병과 기타 퇴폐적인 사회 풍조 일소” 칙서로 확고하게 되었다.⁵⁷ 기지촌은 미군기지를 위해 정화되어야 하는, 낙후되고 위험한 도시이며, 미군기지에 의해 존재되어야 하는 공간으로서 박제되었던 것이다.

5. 맺음말

기지촌은 안보위기와 함께 묶여 반드시 주한미군과 함께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위치지어졌다. 동두천에 기지가 주둔하면서부터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의 환경은 제한되었다. 주민들은 기존의 생계수단을 변경하면서 주한미군에 의존하게 되었고, 미군병사들의 증감, 즉 철군에 따른 경제규모가 지역의 성쇠를 가늠하는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주한미군이 철군하지 않았더라도 기지촌의 경제는 늘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때 경제적 위기의 초점을 주한미군 철군에 맞추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위기를 증폭시켰던 것은 한국정부였다. 기지촌이 기지에 좌우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 역시 정권의 안보지상주의의 결과물이었다. 말하자면 기지생활권의 위기는 미군의 철군이 아니라 주둔으로 시작되었다.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군주둔과, 권위주의 정권의 유지를 위한 안보위기의 상징으로서 활용된 미군주둔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냉전분단국가에서 외국군이 주둔하는 이유이자 동두천이 위험하고 낙후된 접경지역으로서 남아있어야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기지생활권’의 형성과 미군철군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담론에 주목하여 그 역사적 맥락이 냉전체제 하 수립된 분단국가의 성격에 있음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냉전분단 체제 하에서 규정된 구조 속에서 지역과 개인은 어떻게 생활해 나갔는지, 국가권력은 이를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를 돌아봄으로써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위기의 부침과 분단과 대립구조에 대한 고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⁵⁷ “기지촌 정화대책”, 1972.10.28. 계엄사령부, 『관보』, 1972.10.30.